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1.(목) 10:20	배포일시	배 포 시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김태곤 (044-215-7130)	담당자	최상구 사무관(sanggu_choi@korea.kr) 하치승 사무관(hcs017@korea.kr)

**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자원대책 마련

- ☐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1. 추진배경

- ☐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前 GDP 수준 회복(1분기)

-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
- 방역 상황도 인구 10만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 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6.26일 기준, 명): (美)10,048, (英)6,899, (日)625, (韓)298

- ☐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

2. 금번 추경의 4가지 특징

- 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제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 ②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 '20.3차 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 ③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 ④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3.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①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 ②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 ③ 축적된 가게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				
	[일반국민]		[소상공인]	
			기존 피해	향후 피해
100%				
소득하위 80%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②상생소비지원금 (10% 캐시백, 최대 30만원) ①-1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추가 10만원)	③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900만원 ~ 100만원)	③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금지·제한시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 **(백신 · 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장
- 금년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 (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 (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 (0.5조원)
-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 (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반응시 **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0.2조원)

□ **(고용·민생)** 新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장(15.4만명) 등 지원(1.1조원)
-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구분	규모	주요 사업
고용 조기회복 지원	1.1조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3.0만명), SW인력양성(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8만명) 등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직업계고·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275억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 공급(0.3조원) 등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명, 프로스포츠·영화·철도·체육·통합문화이용권 등 소비쿠폰·바우처 5종 발행(484억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476억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2.4만명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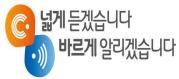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4. 향후 일정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 별 첨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차 추경안 마련 배경

최근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부터 이어진 1년 반의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GDP 규모는 지난 1/4분기에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내수와 고용은 아직 코로나위기 이전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新양극화 위기도 커진 모습입니다.

방역대응에 있어서도
상반기중 인구 30%인 1,500만명 이상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는 등
백신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적시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역할이 다시 한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다행히 기대 이상의 빠른 경기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몇몇 변화로
금년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바
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이를 시장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 2차 추경안의 특징적 모습

금번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총 33조원 입니다.

여기에 추경이 아닌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완화**” 지원분 3조원까지 포함시
금번 총대책 규모는 36조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 청년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원

순수한 추경규모 33조원은

- ① 코로나 피해지원 13.4조원, 지방비 2.3조원 포함시 15.7조원,
- ② 방역지원 소요 4.4조원,
- ③ 고용/민생안정 지원 2.6조원, 그리고
- ④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등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요재원은 금년 초과세수 예상분 31.5조원,
지난 해 세계잉여금 1.7조원, 그리고 기금재원 활용분 1.8조원 등
총 35조원으로 이중 2조원은 채무상환하고
이를 제외한 33조원으로 금번 추경사업을 뒷받침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으로 **추가적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금번 추경규모 33조원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 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확보재원중 **2조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초과세수가 31.5조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후 47.2%로 **1%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당연하지만 **추경대상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3. 추경 주요사업 내용

지금부터는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큰 틀은 ①코로나19 피해지원, ②백신등 방역지원, ③고용/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④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먼저 첫번째 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 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①-1 그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 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①-2 다음으로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게는 4인 가구기준 40만원, **즉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여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0.3조원)

❶-3. 3종 패키지 마지막은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입니다.

이는 2/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소비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드림으로써 소비 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❷ **추경 두번째 축**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4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백신 1억 9,200만회분 구입과 내년 백신 선구매 비용 1.5조원과 금년 백신접종비 0.5조원 등 **총2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으로 **2.2조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백신 관련, 사망 장애시 최대 4.4억원까지의 피해보상비,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 반응시 최대 치료비 1천만원 등 국가책임 강화예산 등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K-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180억원)은 물론 국내 백신개발 임상비용(980억원) 및 구매 선급금(720억원)도 반영하는 등 **백신자주권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❸ **다음 추경 세 번째 지원축으로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총 2.6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㉔-1. 먼저 **고용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을 집중 투입, 40만명 이상**에게 구직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합니다.

우선 **일자리회복, 청년고용, 취업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4만개* 창출을 지원하고 (0.6조원)

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을 위해

8.8만명의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0.2조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명, 신산업 청년채용 지원 3만명, 백신·방역 등 지원인력 6.7만명,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3.7만명

또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15.3만명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0.4조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㉔-2. 다음은 청년희망사다리 구축 측면에서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금융 등 4대 분야에 총 1.8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지원 13만명(0.4조원)**은

앞서 설명드린 **40만명의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5천억원**으로 2배 확대,

글로벌 투자펀드도 **4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0.6조원**)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지원**을 위해 **0.7조원**을 투입,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5천호** 추가 확보(**1.1→1.6만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70~80%)기간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만명 확대(10→12만명, 146억원)** 등

청년 생활·금융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㉔-3. 한편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추가 보강**소요 **0.6조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즉 **소상공인 경영위기**에 대해 **대출·보증 등 긴급자금 6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폐업시 **기존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도 확대(5→6천억원)하겠습니다.

* 현행 임차료 대출 **3.8조원**의 대출한도 확대(**1→2천만원**) 및 보증료 인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2.2조원**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 등

한편 내년 1월로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폐지한 후 **4.9만 가구**에게 **생계급여**,

18.7만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코자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피해추가지원**(희망회복자금), **정책자금 긴급지원**, **구조전환지원 자금** 등을 모두 합할 경우 **총 5.7조원**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㉔-4. 한편 **문화·예술·관광 등 분야의 일자리, 문화소비 지원소요 등으로 0.3조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여행사 ICT 인력 1,600명, 현장 공연예술가 2,000명 등 여행·공연·체육 일자리 1.1만개** 회복을 지원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3백만원** 지원대상도 9천명 확대(1.2→2.1만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체육, 문화 등 5종 쿠폰바우처를 신규추가 발행(484억원)하여 1천억원 이상의 문화소비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4. 추경의 마지막 네 번째 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6조원입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천억원 확대**한 **총 3.3조원 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됩니다.
초과세수를 **세입경정**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등 총 12.2조원의 교부금이 계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원은 지자체·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및 주요 추경사업 매칭지원** 등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4.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우리는 국민, 기업,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경제·방역** 모두에서 선방하며 코로나 **위기대응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 완전한 경기회복 - 부문간 격차해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진경제 도약**을 빠르게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한 점에, 한 곳에 초집중한다는 의미의 주일무적(主一無適) 자세로
금년 방역극복, 경기회복, 경제도약을 향해 전력질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